第2章 韓半島 平和定着 및 統一을 위한 主要 外交活動

第1節 友邦國과의 協力

1. 韓·美關係

가. 韓·美關係의 現況

한·미 양국 관계는 과거 정치·안보에 편중된 관계에서 최근에는 경제·통상·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1992년은 이러한 추세가 더욱 두드러진 한해였으며, 두나라 모두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양국간의 협력 기조는 계속 굳건히 견지된 한해였다.

한·미 양국은 1980년대에 크게 문제된 바 있던 한국내 반미감정 대두나 통상마찰 등을 대체로 극복하고 건전한 양국관계의 기반을 다져 왔으며, 양국 정부와 국민은 탈냉전 시대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 있어 한·미 양국간의 기존 우호·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1992년 1월 부쉬 미 대통령이 방한하여 노태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양국 외무장관들도 3차례의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주요 행정부 및 의회인사의 상호방문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한·미 양국은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안보환경속에서 한·미간 동맹관계가 굳건히 견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인식하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양국간의 균형된 교역의 기조위에 교역뿐 아니라 투자, 과학, 기술 등 제반 경제분야에서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증대되면서 양국간 협력의 지평은 동북아와 아·태 지역은 물론 범세계적인 문제에까지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아·태 지역에서는 APEC 및 ASEAN-PMC등 역내 포럼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구소연방 소속국가들에 대한 지원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양국간 협력의 폭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미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30년만에 최초로 문민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앞으로 한·미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나. 雙務 關係의 擴大·發展

1992년 1월 부쉬 미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쉬 대통령의 방한은 걸프전 이후 아·태지역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속에서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관계를 명실상부한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킨다는 공동목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양국간에 1992년 1월, 7월 및 10월 세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미 외무장관 회담과 국방·경제부처 각료간의 쌍무협의는 한·미 양자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였으며, 양국간 협력관계의 강화를 위한 진전을 이루었다.

한국으로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였으며, 미국으로서도 본격적인 선거전이 진행된 한해였지만, 제분야에서의 양국 정부간 협력은 계속 긴밀히 유지되었는 바, 이는 양국간의 협력기조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선거뿐만 아니라 미국의 선거결과에도 큰 관심을 가진 바 있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한·미 양국간의 우호·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미국의 대한 정책도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하여 호혜적인 쌍무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는 바, 동 조약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최근 한·미 양국은 한국방위체제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지원하는 체제'에서 점차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는 한·미 안보협력 관계를 보다 대등한 관계로 조정하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세계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위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미국의 입장이 서로 조화된 결과로 평가된다.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변화를 부문별로 고찰해 보면, 우선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한반도 내외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한·미 연합 억제력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있다.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제1단계기간('90~'92) 중에는 한·미간 합의하에 7,000명이 철수하였으며, EASI 제2단계('93~'95) 기간중의 추가 철수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CFA)를 1992년 9월 1일부로 해체하였으며, 한·미 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Armistice Operational Control)은 1992년 10월 제24차 한·미 연

례안보협의회(SCM)에서 늦어도 1994년 말까지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전환시기와 시행지침은 1993년 제25차 SCM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은 1991년 2월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통하여 불평등 성격을 가진 양해사항과 교환 공한을 폐기함으로써 보다 대등하고 건전한 안보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한·미 전시지원협정(WHNS)이 1992년 11월 발효됨으로써 유사시 미 증원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개와 배치를 보장할 수 있는 전시지원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국방관련 첨단기술비밀의 보호를 보장하면서 이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특허협정(PSA)이 1992년 1월 체결되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공동방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서로 균형있게 분담하는 것이 상호이익에 부합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정부가 1995년까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WBC)의 1/3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증액 부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991년에 1.5억불, 1992년에 1.8억불을 각각 부담하였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상호 보완적이고 포괄적인 안보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계속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미 양국간 통상관계는 1990년 하반기 이후 한국의 건전소비운동 및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과 관련한 미측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야기된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면서 냉전의 종식에 따라 경제·통상문제가 중요성을 더해가는 국제적 추세에 상응하여 양국관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보다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미 양국은 1992년 1월 한·미 정상회담시 합의에 따라 영업환경개선 방안협의(Presidents' Economic Initiative : PEI)를 개시하여, 통관·표준·투자·기술등의 분야에서 양국기업의 영업환경을 실질적·체계적으로 개선,

양국간의 경제동반자 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특히 과거와 같은 대결적 협상방식을 지양하고 자발적 이행에 입각한 호혜적 통상협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양국간 통상협의의 분위기를 일신시켰다. 양국은 또한 이러한 새로운 협의방식을 추진함과 아울러, 기존 협의채널을 통한 현안의 해결과 상호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한 바, 통신망 장비조달 개방문제, 금융자율화 및 개방문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육상트럭킹 개방문제 등에 큰 진전이 있었으며, 오랫동안 현안이 되어온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비밀특허보호협정이 마침내 서명되어 과거의 통상위주의 경제관계에서 과학기술, 산업간 협력을 포괄하는 다원적 협력을 추진할 기반이 조성되었다.

또한 양국은 외무장관 등을 비롯, 양국 경제관계 각료급과 주지사·의회의원 및 보좌관의 활발한 교류. 접촉을 통해 양국간 통상·경제문제에 있어 상호 이해증진 및 협력분위기를 제고시켰다. 이렇듯 1992년의 양국간 통상관계는 단순한 통상문제의 해결차원을 넘어 영업환경 개선방안협의와 다양한 형태의 교류·접촉을 통하여 보다 복합적이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한·미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양국간 문화교류도 양국 수도등 각지에 설치된 총영사관 및 문화원, 우리나라의 41개 도시와 미국의 49개 지방자치단체간에 결성된 자매결연등을 통해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며, 정부도 학술·문화 교류를 각별히 지원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미국내 한국학 진흥을 중점적인 사업으로 선정하여, 미국내 각 학술기관의 한국 연구를 활발히 지원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 成熟한 同伴者로서의 韓·美關係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미 양국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

화와 안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균형된 교역의 바탕위에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유일한 동맹국으로서, 한·미 양국관계는 오랜동안 우리 대외정책의 기축이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협력 분야가 확대되면서 일시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갈등도 동맹관계라는 하나의 커다란 틀에서 용해되어 원만히 해결되어 나가고 있다.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통일외교 추진에 있어 한·미 우호협력관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동반자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간의 상호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韓·日關係

가. 概 觀

한·일 양국을 둘러싼 동북아지역은 최근 한·중수교, 중국의 개방·개혁 정책의 추진에 따른 국력의 신장 및 일·중관계 증진, 한·러관계의 강화, 미국의 신행정부 등장 등으로 새로운 질서 구축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과의 유대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1992년 1월 미야자와 총리가 공식 방한하고, 11월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교또를 실무방문하여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실무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정

상간 협의체제의 정착을 통하여 한·일 협력관계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양국은 1992년중 4차례의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군대위안부문제 등 양국간 현안문제, 북한의 핵개발, 일·북한 수교교섭 문제, 지역문제 등에 관하여 긴밀하고 건설적인 협의를 행하였다. 이외에도 양국은 고위정책협의회 및 아주국장회의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양국간 현안문제 해결 및 협력방안 등에 관해 활발한 협의를 해왔다.

한편, 일·북 수교회담은 92년중 세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북한 핵문제와 이은혜문제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일측은 일·북한수교가 북한을 개방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북한 교섭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

나. 頂上外交를 통한 未來指向的 兩國關係 構築

1991년 11월 취임한 미야자와 총리는 1992년 1월 취임후 첫 해외방문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일본총리로서는 최초로 국회에서 연설을 하였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미야자와 총리는 군대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함으로써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한·일 경제관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양국 정부차원에서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구체적 조치계획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1992년 11월 교또에서 미야자와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간 현안 및 국제정세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미·일간 협력유지의 필요성을 재

확인하고 국제무역 환경의 개선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양국간 협조강화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또한 교또 회담은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정상간의 첫 실무회동이라는 점에서 한·일간의 새롭고 성숙된 외교형태를 정착시켰다.

다. 諸般懸案 解決을 위한 努力

1992년 1월의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군대위안부 문제는 한때 양국 국민간의 감정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그러나 동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과 이 문제로 인하여 양국간 우호협력관계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2년 7월 6일 일본정부가 제1차 조사결과를, 그리고 7월 31일 우리 정부도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4월 17일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함으로써 93년 1월부터 약 64만명의 재일한국인 등 영주외국인에 대하여 지문날인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대체수단으로 본인의 서명과 사진, 가족단위 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1991년 대일무역적자규모는 88억불에 이르러 무역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2년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이 1992년 6월 작성되어 양국정상에게 보고되었다. 양국은 동 실천계획에 따라 1992년 9월과 12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 산업기술 협력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산업·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고 한국상품의 일본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1980년대 이후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테두리내에서 그간의 양국 어업실태 변화를 반영한 조업자율규제조치를 양국 주변수역에 실시하여 왔다. 1992년 2월 양국 정부는 기존의 자율규제조치를 1994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1994년 1월 1일 이후 동 조치의 실시 상황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양국간의 협의에 따라 양국 정부는 각종 회의를 개최하여 자율규제 조치의 지도·단속 등 운용상의 문제와 양국 주변수역내 수산자원의 유지·관리·증대에 관한 협력방안을 협의·실시하였다.

한편, 1991년 1월 카이후총리 방한시 일측이 「헤이세이(平成)의 한국통신사」 행사 개최를 제의함에 따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1992년 6월 한국문화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 일본 각지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였다.

3. 西歐諸國과의 關係

가. 概 觀

서구제국은 우리나라가 독립후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정치·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우리를 지원해 온 전통 우방국들이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및 1980년대를 통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서구제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우리나라를 아·태지역의 중요한 협력대상 국가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91년에 남·북한 UN 동시가입, 북한의 IAEA 핵안전협정 체결문제 등 중요한 정치·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이해,

지원하였던 이들 서구국가들은 1992년도에도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의 계속적 지지뿐만 아니라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와 서구제국간의 경제·통상관계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EC와의 지적소유권 문제, 우리나라의 보험, 금융시장 개방문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문제 등 경제·통상분야의 현안 타결이 서구제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유지 및 발전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나. 西歐諸國과의 傳統的 友好關係 強化

정부는 구주와의 동반자관계 정립을 위하여 1992년에도 정부 및 의회의 주요인사 교환방문 외교를 추진하였으며, 서구제국과의 쌍무적 협의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를 전개하였다.

1992년중 주요 방문외교로는 대전 EXPO 참가 유치교섭단 발트 3국 방문(8. 2-8), 최영철 통일원장관 겸 부총리 독일 방문(8. 30-9. 4), 이상옥 외무장관 오스트리아 공식방문(11. 12-14)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국회, 사법부 및 여타 행정부처에서도 많은 주요인사들이 서구국가들을 방문하여 양국간 관련분야 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서구제국으로부터도 Strauss Kahn 프랑스 산업 및 대외무역장관(2. 9-11), Maij Weggen 네덜란드 교통·공공사업장관(2. 23-26), Caithness 영국 외무부 국무상(2. 26-27), Goodlad 영국 외무부 국무상(6. 24-25), Thatcher 전 영국 수상(9. 2-5), Holst 노르웨이 국방장관(9. 10-13), Hovmand 덴마크 주택장관(9. 19-23), Hunt 영국 웨일즈 담당 장관(9. 27-30), Andriessen 네덜란드 경제장관 (9. 28-30), A. Pavlidis 희랍 해운성장

관(10. 3-7), Baudouin 벨기에 국왕내외(10. 12-19), Vaeyrynen 핀랜드 외무장관 (10. 24-26), Charles 영국 왕세자 내외(11. 2-5)등이 방한하여 우리나라와의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인사의 교환방문 이외에도 제7차 한·독 정책협의회 (5. 1, 서울), 제4차 한·불 정책협의회(5. 26, 파리) 등이 개최되어 구주제국과의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통한 관계 공고화에 기여하였다.

다. EC와의 實質協力關係 強化

1992년에도 정부는 EC와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양측은 한·EC 주세회담(4. 13-14. 서울, 5. 14-15. 브뤼셀), 한·EC 모니터링 회의(7. 7-8. 서울), 지적재산권 후속협상(7. 28-29. 브뤼셀), 한·EC 통신회담 (7. 28-29. 브뤼셀), 제4차 한·EC 해운회담 (8. 31-9. 1. 서울), 한·EC 고위협의회(11. 11-12. 브뤼셀), 한·EC 섬유협상 (12. 14-15. 브뤼셀) 등 일련의 회담을 통하여 통상 현안의 해결 및 통상마찰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한·EC간 정치협력 긴밀화를 위하여 한·EC Troika 외무장관회담이 1992년 7월 ASEAN-PMC회의 기간중 마닐라에서 개최된 바 있다.

4. 中東·아프리카地域과의 關係

중동·아프리카지역은 세계 총면적의 27%, 세계 총인구의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국가수의 절반에 가까운 67개국이 위치하고 있어 1960년대 이래 유엔, 비동맹 등 다자간 외교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

력을 행사하여 왔다.

우리의 대중동·아프리카 외교는 초기에 외교관계 확대와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확보를 위하여 시작되어 왔으며, 우리 경제력의 향상과 국제화에 따라 경제적 유대관계도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며, 특히 1970년 이후에는 우리 해외건설 수주의 80%이상, 원유도입의 70%이상을 차지하며 우리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교역량은 전체 교역량의 10%수준을 점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관계의 심화와 함께 우리 정부는 각종 원조사업도 활발히 시행함으로써 비교적 개발이 부진한 동 지역국가들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중동·아프리카지역내의 거의 모든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특히 1991년중 우리의 UN가입 및 다수 국제기구 이사국 진출에는 이 지역국가들의 지지가 적지않은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중동·아프리카 지역국가들은 현재 대부분 개도국이지만 앞으로 상당히 성장 잠재력이 있으며 우리로서는 원유를 비롯한 각종 광물, 어업, 삼림자원의 공급원으로 그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을 위시한 경제진출 확대의 대상지역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수출시장으로서 이 지역에 새로이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더불어 중동·아프리카지역내의 정세변화는 우리나라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국제평화유지의 차원에서 우리의 기여가 요구될 것인바, 1990-1991년중 걸프사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정부의 다국적군에 대한 지원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1992년중 주요방한 인사로는 Soglo 베넹대통령 (5. 31-6.

4)을 비롯하여 Mbonimpa 부룬디 외무장관 (2. 25－28), Botha 남아공 외무장관(3. 24－25), Van－Dunem 앙골라 외무장관(3. 27－31), Mwaanga 잠비아 외무장관(5. 7－10), Bongo 가봉 외무장관(8. 3－7), Sseyoum Mesfin 이디오피아 외무장관(11. 26－29), Diria 탄자니아 외무장관 (11. 22－25)등 7개국 외무장관 방한과 El Rachid 모로코 경제기획부장관(3. 16－20), Ngbanda 자이르 국방장관(4. 13－16), Ahwoi 가나 에너지장관(4. 14－17), Hamdi 수단 재무 경제기획장관(4. 23－28), Fernandes 앙골라 산업장관(6. 18－28), Al－Arashi 예멘 내각담당국무장관(12. 23－28) 등의 방한이 있었고, 그밖에 Al－Masoudi 예멘 여당의원(7. 6－10), 예멘 의원사절단(9. 19－26) 등이 방한하였다. 또한 상호간 통상증진을 위해 스와질랜드 투자사절단(7. 10－14)이 방한하였다.

第2節 北方外交의 推進

1. 概 觀

가. 北方外交 推進의 歷史的 背景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1985년 집권이후 신사고 외교의 기치하에 미·소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간에도 관계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1980년대 중반이래 전 세계는 신데탕트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세계적인 탈냉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986년 1월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삼아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한반도에서는 냉전체제의 유산이 청산되지 못한채 긴장상태가 지속되었다.

국제정세 발전에 역행하는 이와 같은 소모적 대립의 지속은 남·북한 분단을 고착시키고 한민족 전체의 역량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결단이 절실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제질서와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한반도 안보환경을 개선시켜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할 목적하에 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7월에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특별선언」(7. 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민족공동체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였으며, 북한을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성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통일외교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7. 7 선언의 정신에 입각, "모스크바와 북경을 우회하여 평양으로 가는" 북방외교를 우리의 주도하에 일관성있게 추진한 결과,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날 남·북한간 화해·협력의 여건이 어느때보다도 훨씬 개선되었다.

나. 北方外交의 成果

1988년부터 본격화된 북방외교는 1988년 9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가져왔으며, 이를 발판으로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구소련 등 동구국 전체 및 몽골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92년 8월 중국과의 수교, 1992년 12월 베트남과의 수교까지 이루어짐으로써 거의 모든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구소련과는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래 1990년 12월, 1991년 4월 양 정상간의 교환방문으로 양국간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는 구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와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라는 공통의 정치·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관계로 전환되었다.

한·러시아 양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등 국제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1992년 11월 옐친 대통령의 방한시에는 한·러간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국과는 1991년 1월 무역대표부 설치이래, 한·중 교역액이 중·북한간 교역액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등 실질협력관계가 심화되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현실적인 방향으로 변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1991년 5월 유엔 단일의석 가입안을 철회케 하고 남북한의 유엔 동

시가입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 대해 IAEA 핵사찰을 수용토록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북한에게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권고하여, 1992년 1월 북한이 경제특구 건설계획을 발표토록 하는 등 북한의 변화와 개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북방외교의 추진은 북한으로 하여금 1991년 12월 「화해, 불가침 및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케하고, 남북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자세를 표명토록 유도하는 큰 요인중의 하나가 되었다.

북방외교의 추진결과 우리의 수교국 수는 1987년 12월 127개국에서 1992년 12월 현재 170개국으로 43개국이 증가하였고 서울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의 숫자도 1987년 12월 55개에서 1992년 12월 현재 83개가 되는 등 우리 외교의 지평이 한층 넓어지게 되었다.

한편, 인구 11억의 중국과 2억 9천만 인구의 구소련 등 북방시장의 개척으로 우리의 대외경제 진출영역이 확대되어, 대북방 수출은 1986년 8억불에서 1992년 38억불로 4.5배 증가하고 대북방 전체 교역량도 1986년 15억불에서 1992년 83억불로 5.5배 증가하였다.

다. 北方外交의 推進方向

앞으로의 북방외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북방국가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러시아와는 1992년 11월 엘친 대통령 방한시 체결된 기본관계조약을 바탕으로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한·러

양국간의 공조체제가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중국과는 실질관계 강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북한이 더욱 개방적이 되고 핵안전협정의 성실한 이행 및 남북교류협력에 적극 호응하도록 협조체제를 심화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북방 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해서는 북방국가들의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 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되, 선발 참여국으로서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토록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의 북방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일·러시아·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본격화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민족의 염원인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현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2. 韓·中 關係

가. 韓·中 修交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외무장관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은 한·중 양국간 수교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과거 냉전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한·중 양국은 이미 1991년초 민간형식의 무역대표부를 상호 설치하여 민간차원의 교류와 접촉을 위한 협의채널을 구축하였으며 교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을 증대시키면서 실질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

한·중 수교로 한국은 주변 4강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함으로써 통일

을 위한 외교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게 되었다.

이로서 "모스크바와 북경을 거쳐 평양으로"가는 북방외교가 일단락되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외교적 초석이 마련된 셈이다.

나. 노태우 大統領 中國 公式訪問

한·중 수교후 1992년 9월 27-30일간 노태우 대통령은 중국 양상곤 국가주석 초청으로 우리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국빈으로서 중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노 대통령은 양상곤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강택민 당총서기, 이붕 국무원 총리 등의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 한·중 양국관계 증진방안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양국간 상호 선린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기존의 민간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을 정부간 협정으로 대체하고, 과학기술협력협정과 경제·무역·기술 공동위원회 설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항공 및 해운협정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교역과 강제협력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다. 兩國間 實質協力關係의 增大

한·중 수교를 계기로 기업의 대중국 진출이 증대되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음에 따라 경제협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989년초 소규모의 간접 교역으로 시작된 양국간의 교역이 1990년의 38억불에서 1991년에는 58억불로 증가하였으며,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에는 82억불에 달하였으며 오는 1990년대 중반에는 양국간 교역액이 200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韓·中 交易動向〉

〈단위 : 억미불〉

년 도	89	90	91	92
수 출	14.4	15.5	23.7	44.9
수 입	17.0	22.7	34.0	37.2
교 역 액	31.4	38.2	57.7	82.1

양국간 인적교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며, 양국간 실질협력관계 증대 필요성에 따라 중국 여행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과거의 친척방문 경향에서 탈피하여 상용목적, 교원 및 학생연수 등으로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양국간 인적교류는 더욱 증가할것으로 전망된다.

〈韓·中 人的交流 動向〉

〈단위 : 명〉

년 도	89	90	91	92
방 중	14,000	32,000	43,700	43,000
방 한	9,000	25,000	44,000	45,000
계	23,000	57,000	87,000	88,000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도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1992년말 현재 허가기준으로 투자건수는 443건, 금액으로는 약 3억 9천만불이며 이러한 우

리의 대중국 투자는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한·중 수교를 계기로 양국간 사회, 문화분야 인사교류는 물론 도시간 자매결연, 예술단 교환, 문화원 개설 등 문화·교육·학술·체육 등 제반분야에서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3. 韓·獨立國家聯合(舊蘇聯)

가. 概 觀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및 1990년 9월 외교관계 수립으로 양국관계가 정상화된 이래, 1990년 12월과 1991년 4월에 양국정상이 교환방문을 실현하여 2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소 양국은 그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새로운 차원의 관계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발전은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이를 승계한 이후에도 지속되어 1992년 11월 엘친 대통령 방한 및 방한시 체결된 한·러 기본관계조약 등으로 향후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정치·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우호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나. 分野別 關係現況

(1) 政治分野

한·러시아간 정치적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입장은 인접국이자 한반도의 평화·안정 및 궁극적인 통일에 주요한 역할을 할 러시아와 신속히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구도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간에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데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한·러시아간 정치분야의 관계진전을 바탕으로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러시아와 호혜적인 실질협력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우리의 경제적 번영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1991년 12월 러시아가 구소연방을 계승하게 됨에 따라 한·소간에 발전되어 온 선린우호관계는 한·러시아간의 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

러시아는 가격 자유화, 사유화 정책 등 경제개혁의 추진에 따른 국내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외관계에 있어 당분간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국력과 지정학적 여건상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계속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의 등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오히려 구소련 당시보다 더 유리한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은 러시아의 북한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러시아는 1992년 1월 로가초프 대사(구소련의 아주담당 외무차관 역임)를 옐친 대통령의 특사로서 북한을 방문케 하여 소련이 해체된 이후의 러시아·북한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미 한·소 수교이후 지속되어 온 양국관계 발전으로 소·북한 관계는 과거에 비해 소원해져 왔으며 구소연방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새로이 등장한 이후 러시아·북한 양국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로가초프 특사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측은 북한과의 관계를 과거 소·북한간의 이념적 특수관계를 배제

한 국가 대 국가간의 일반적인 관계로 보고 양국간의 제반 분야에 있어서 호혜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여 과거 소련이 북한에 해왔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군사적 지원이나 경제원조를 계속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남북 합의서의 이행이나 북한의 IAEA와의 핵안전협정 서명 및 이행에 있어 북한측이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소·북한간 체결된 상호원조조약이 1961년 동 조약의 체결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변화하여 현실을 적절히 반영치 못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련 및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건설적인 영향력 행사는 북한으로 하여금 종래의 단일의석하의 유엔가입을 고집하던 기존입장을 변경토록 하여 결국 1991년 9월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케 되고 또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촉진시켜 1991년 12월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 정부는 구소련과 발전시켜 온 선린협력관계를 러시아와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1992년 11월 엘친 대통령의 방한은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최초의 아시아지역 방문으로서 한국을 그 첫 방문국으로 한 것은 러시아가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우리나라와의 안보 및 실질협력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양국정상이 직접 서명한 한·러 기본관계조약은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존중 등의 이념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시장경제체제를 함께 추구하면서 과거 냉전체제하에서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우호협력국으로서 제반 분야에

서의 관계 발전의 의지를 과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문서가 될 것이다.

옐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당사자간 직접대화에 의한 평화·민주적 통일원칙에 대한 지지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여건 조성 노력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옐친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지지하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최대 협조를 천명하였으며, 러·북한 상호원조조약 내용중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는 새로운 체제로 출범한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과거와 같이 특수한 이념적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관계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한반도 주변 4강의 하나인 러시아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 안보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옐친 대통령 방한중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 세관협력협정, 문화협정 등의 문서들은 양국 협력증진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한·러간 각 분야에 걸쳐 실질협력을 내실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옐친 대통령은 1983년 KAL기 피격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희생자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전 관계 문서의 전달을 약속하는 등 양국간 불행했던 시대의 잔재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정부가 스탈린 치하에서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법적지위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재러시아 한인들에 대한 법적보호와 동등한 대우를 분명히 하였다.

우리정부는 1991년 12월 30일자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 이외의 독립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의 독립을 승인하

고 1992년 1월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데 이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여타 국가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독립국가연합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면적, 인구, 산업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1992년 12월에 대사관을 개설하였으며, 우리 교포들의 밀집거주지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교육원을 설치하여 이들과의 제반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주요 국가의 고위인사 방한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이들국가와 우리의 발전 경험을 나누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이들의 건설적인 기여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자국의 경제발전 모델로 설정하고, 1990년 1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방한 이후 다수의 연수직원을 한국에 보내어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을 익히고 있으며, 우리 기업체의 카자흐 진출을 유치하는 등 한국과의 실질협력관계 증진에 있어 여타 국가보다 앞서 나가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 등 여타 국가들도 이러한 좋은 선례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 經濟通商分野

한·러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매우 커 자원개발, 과학기술교류, 교통, 통신, 수산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이 적극 모색 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교역과 합작투자 및 해운·항공 등의 교통편 확장 등 양국간 경제분야 교류가 급증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액은 1990년의 9억불에서 1991년에는 12억불을 상회할 정도로 증대되었으며, 1992년에는 소련의 붕괴 등 구소연방의 국내사정으로 다소 침체되었으나, 러시아 경제가 안정되면 양국간 교역량이 현저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국과 러시아와의 실질협력관계는 과학기술분야, 자원개발, 어업협력과 구소련이 보유했던 거대한 규모의 군수산업을 민영화 하는 분야, 농업개발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관련 고위인사들을 방한 초청한 바 있고, 1992년 1월 1일부터 개방된 블라디보스톡에는 1992년 8월 총영사관을 개설하였으며, KOTRA와 그 밖의 우리기업도 러시아의 주요지역에 진출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양국간 협력관계는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3) 社會·文化分野

사회·문화분야 교류는 수교 이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한·소 관계 정상화를 앞당기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학술·언론분야의 진보적 사고를 가진 양국 인사들이 현실적인 대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이 새로운 사고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양 국민간의 활발한 교류 결과, 1989년에 4,000명이었던 인적 교류는 1992년에는 24,000여명을 상회 할 정도로 증대되었다.

4. 韓·中東歐圈 關係

가. 概 觀

제6공화국이 북방외교를 주요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중·동구 제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헝가리(89. 2. 1), 폴란드(89. 11. 1), 유고슬라비아(89. 12. 27), 체코슬로바키아(90. 3. 22), 불가리아(90. 3. 23), 루마니아(90. 3. 30) 및 알바니아(91. 8. 22) 등 중·동구권 7개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정상외교, 고위 인사교류 및 정부간 협정 체결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기본관계를 강화하면서 경제·통상·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실질협력관계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동구 국가들은 지난 40여년이상 북한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수교후 불과 2-3년이란 단기간내 우리의 유엔가입 지원을 비롯,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등 친한정책을 견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기에 놓여있는 이들 국가 모두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전수, 경제적 진출 및 기술협력 제공 등을 적극 요청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分野別 關係現況

1) 정치분야

92년중에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구유고)의 해체에 따른 구유고 소속 독립선언 공화국 5개국에 대한 승인·수교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우리정부는 4월 15일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승인한데 이어 11월 18일 이들과 각각 수교하였다. 세르비아 공화국과 몬테네그로공화국이 새로이 결성한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신유고)에 대해서는 동 국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에 적극 동참한다는 견지에서 승인·수교문제를 유보하고 구유고 관계의 연장으로서 잠정적으로 사실상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대해서는 동 국의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또한 마케도니아에 대해서는 그리스와 동 국간 국명문제가 타결될 때까지 승인·수교를 보류하고 있다.

한편 92년중 중동구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 심화를 위한 주요인사의 교환방문으로는 Havel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의 공식방한(4. 26-28)을 비롯하여 Separovic 크로아티아 외무장관(3. 25-27), Severin 루마니아 민영화 청장(4. 23-25), Tancig 슬로베니아 과학기술장관(6. 1-3), Dobrev 불가리아 외무차관(6. 29-7. 1), Tinka 루마니아 외무차관보(6. 22-25) 등이 방한하였다. 우리측 인사로서는 이진삼 체육청소년부장관(2. 11-12)과 김진현 과기처장관(6. 6-14)이 헝가리를 방문하고 박준규 국회의장이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11. 13-17)하였으며 이밖에 6월에는 채의석 외무부 본부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우호협력사절단이 불가리아와 알바니아를 방문하였다.

2) 경제·통상분야

중동구국가와는 수교이래 꾸준히 실질협력관계를 확대해 오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국가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실업증대, 인플레 만연, 생산성 저하 등 경제난과 함께 정치, 사회적 불안정을 겪고 또한 유고사태와 같은 지역분규의 발생으로 이 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은 수교초기의 기대에 비추어 다소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92년도 중동구국가들과의 왕복 교역량은 전년도의 8억4백만불에서 대폭 줄어든 약 5억3천7백만불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시장개방화에 따른 중·동구 국가의 초기 특수경기가 사라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역규모는 양측간 경제규모 증대 및 경제교류의 확산에 따라 이 수준을 하한선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정부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동구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감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진출을 권장하고 이들 국가와의 실질협력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 지역 국가중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의 경우 EC 가입의 전단계로 EC와 체결한 준회원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대EC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의 잇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문화분야

우리나라는 중·동구국가들과 관계정상화 이후에 학술,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도 이들 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구지역국가의 한국학 연구의 지원 및 교수 상호파견,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민간교류 차원에서의 상호이해 및 우호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第3節 平和統一 基盤造成

1. 南北韓 關係 槪觀

1992년은 그간 남북한이 채택을 위해 노력해온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2월 19일 발효되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모색했던 한해였다.

북한은 오랫동안 미루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임시사찰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남북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구성된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사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이러한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간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의 1993년도 실시를 중지하기로 하였고, 또한 미국이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갖는 것을 허용하였다. 1월 22일 미국무부의 캔터 차관보와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이 만난것은 이러한 남북관계의 전반적 화해무드가 반영된 것이었다.

한편 우리정부는 8월 24일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이어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한·중 관계를 급격히 진전시켰으며, 이러한 북방외교의 성과는 남북대화 진전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북한측과 협의를 계속해온 우리정부는 5월의 7차 고위급회담에서 각종 공동위원회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하고, 9월의 8차 고위급회담에서는 세부실천 내용을 담은 분야별 부속

합의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활발한 대화와 함께 정부는 7월 북한의 김달현 부총리가 서울을 방문토록 초청하고 남북경협 문제를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수차 개최된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는 상호사찰을 회피하려는 북한측의 태도로 인하여 계속 공전되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인도적 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이산가족의 상호 교환방문도 북한측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10월에 발표된 남한 조선 노동당 간첩사건은 정부내의 대북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같이 후반기 들어 남북한 관계가 긴장되고, 또한 북한이 핵개발 의혹 해소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되자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1993년도에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북한은 이를 구실로 남북고위급회담과 각종 공동위 회담 모두를 거부함으로써, 회망과 기대속에 시작된 남북회담은 실망과 결렬속에 끝나고 말았다.

2. 南北基本 合意書의 發效와 履行

2월 18일-21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키고,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발효시켰다.

이어 5월 5일-8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시한이 명시된 이행기구(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남북정

치, 군사 및 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구성, 운영 합의서를 서명·발효시킴으로써 화해. 협력시대를 여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우리정부의 노력으로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에 북한측과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9월 15일-18일간 다시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는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등 3개 분야의 부속합의서와 화해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금후 각 공동위원회(남북 화해, 군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남북관계는 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실천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7차 고위급회담시 합의했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사업에 대해서, 북한측은 핵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 전환과 이인모 송환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태도를 바꾸어 결국 이 사업은 무산 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북한이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의 93년도 재개 결정을 이유로 남북대화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남북간 제반 합의사항의 이행은 제도만 만들어 놓은 채 실천의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3. 韓半島 非核化 實現 努力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상호 핵사찰 실시에 필요한 사찰규정과 사찰 실시 기구 마련을 위해 북한측과 수차례의 대표접촉을 가졌으며, 그 결과 3. 14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사찰 규정 채택시한을 합의서 발효 후 2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하고, 사찰 규정 마련후 20일 내에 첫 사찰

을 실시하며 늦어도 6월말까지는 상호사찰이 실시되도록 북한측과 합의하여 이를 공동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수차례의 핵통제공동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이미 철회했던 비핵지대화 논리를 다시 주장하거나, 소위 '의심동시해소원칙'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상호사찰을 위한 사찰규정 마련에 아무런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즉 북한측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영변지역 핵시설을 이미 사찰하였으므로 우리측의 핵무기, 핵기지 및 핵시설만 사찰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가하면, 비핵화 검증의 요체인 특별사찰 제도를 계속 거부하는 등 핵통제 공동위 회담에 형식적으로 임하였으며, 이에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어떠한 의미있는 성과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4. 南北韓 經濟協力 論議

남북대화의 진전은 남북한간에 경협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였다. 먼저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1월 16일-25일간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측과 경공업분야 합작,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남포합작공장 건립에 원칙적 합의를 하는등 남북경협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어 여타 기업인들도 다수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김달현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장을 7월 19일-25일간 방한토록 초청하여, 우리의 산업시설을 사찰하고 최각규 부총리와 남북경협에 관한 협의도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협에 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핵문제 해결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북한의 태도로 인하여 남북경협은 구체적 진전을 가져오지 못

하였다. 정부로서는 핵문제의 해결없이는 남북경협의 실질적 진전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북한측이 먼저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측은 남북상호사찰에 대해 계속 회피적 태도로 일관하여, 경제인들의 상호방문에도 불구하고 대북투자와 같은 실질적인 남북간 경협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5.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의 梗塞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상호사찰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핵통제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측과 수차에 걸쳐 사찰규정 채택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 한편 북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사찰이 실시됨에 따라 북한의 핵관련 시설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이루어졌는데, 특히 북한측이 '생화학실험실'이라고 주장하는 시설이 완공시 핵재처리시설이 될 것이란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측은 이 시설이 비핵화공동선언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건설중단과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철저하고 효과적인 남북상호 핵사찰을 위해서는 민간·군사시설을 막론하고 핵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모든 시설이 사찰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며, 미군기지에 대한 사찰만을 요구하고 특별사찰에 대하여 계속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의혹 해소에 소극적인 태도에 따라 남북상호핵사찰의 이행을 긴밀히 협의해 온 한미양국은 10월 8일-9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이 상호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993년도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 준비를 진행시키기로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저지를 위해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계획을 계속 유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8차 고위급 회담시 합의한 각종 공동위원회와 9차 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핵통제공동위원회 이외의 모든 남북대화가 중단되었다.

이로써 남북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1992년은 북한 핵문제가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한채 실망과 대립속에 끝나게 되었다.

第4節 유엔 및 非同盟에 대한 外交

1. 유엔外交

가. 유엔加入 以後 1年

지난 40여년간 우리외교의 최대현안의 하나였던 유엔가입 실현은 우리 외교사에 한 획을 긋는 쾌거였다. 특히 우리의 유엔가입은 냉전체제붕괴 이후 유엔이 신국제질서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된다 하겠다.

유엔가입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유엔가입외교」체제로부터 「유엔외교」체제로의 전환이었다. 그동안 유엔가입이라는 현안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 각 분야에 걸친 유엔의 활동을 파악하고 또 이에 참여하는 데는 다소 소홀할 수 밖에 없었으며, 무엇보다 회원국이 아닌데 따른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적극적인 유엔활동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유엔외교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유엔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가 우선적인 과제라고 보고, 유엔산하 주요기구의 이사국과 주요회의의 의장단 진출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2년 2월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를 시발로 1992년 4월 유엔개발계획(UNDP),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계획조정 위원회(Committee for Program and Co-ordination) 및 공보위원회 (Committee on Information)에 진출한데 이어 11월에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등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주요회의의 의장단 참여 노력도 결실을 맺어 19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

된 유엔환경개발 정상회의(UNCED) 부의장국으로 선출된 바 있다. 우리는 또한 유엔총회 1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제47차 총회기간 동안 부의장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우리는 가입과 함께 유엔사무국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1992년 4월 유엔사무국 주관하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무국 전문직 직원 선발시험이 실시되어 한국인이 유엔사무국에 근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유엔 사무국 진출은 우리의 외교자원 축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바, 정부는 앞으로 사무국 고위직 진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성원으로서, 그리고 선발개도국으로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유엔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상기해 볼때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에서 캄보디아 총선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요원을 1992년 7월 캄보디아 잠정관리청(UNTAC)에 파견한 바 있으며, 1992년 9월 유엔 PKO에 대한 우리의 참여의사를 유엔사무국에 통보했다.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또한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이 상호협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은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합의된 바 있다. 정부는 국제기구 맥락에서 건설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왔고 뉴욕 및 제네바에서 사안별로 남북한대표부 관계관간 접촉을 가져왔다. 또한 1992년 2월에는 UNDP(유엔개발계획)주관하의 두만강 개발사업관련 정부간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나. 노태우 大統領의 유엔訪問

노태우 대통령은 1992년 9월 20일-24일간 제47차 총회에 참석하였다. 1988년과 1991년에 이어 세번째인 노대통령의 유엔방문은 신흥공업국으로서의 국력과 국제사회 기여의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엔외교의 기반을 다졌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유엔방문 기간중 총회에서 연설하였으며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과 가네프 총회의장 등 유엔 주요인사와 폭넓은 접촉을 가졌다.

노대통령은 총회 연설에서 새로운 동북아 질서구축을 위한 관련국간의 대화를 제의하고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에 모든 국가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으며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노 대통령은 또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브룬트란트 노르웨이 수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주요 국제현안과 양국 공동관심사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 와타나베 일본 외상, 이글버거 미 국무장관대리 및 스코우크로프트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의 예방을 받고 새로운 동북아 질서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다. 第47次 유엔總會 決算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온 세계의 기대와 관심속에 1992년 9월 15일 개막된 제47차 유엔총회는 군축, 경제사회개발, 환경, 인권, 지역분쟁등 주요 국제문제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270여개의 결의와 결정을 채택하였다.

제47차 총회는 동서냉전체제의 와해를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협조와 타협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물론 몇몇 주요사안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남·북대립도 과거와 같은 논쟁을 위한 논쟁에서 탈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제47차 총회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우선 각국의 관심이 군사, 정치 분야외에 경제, 사회분야로도 확산되고 특히 후진국의 경제사회 개발과 지구환경 보존문제등이 유엔의 우선과제로 부상한 점을 들 수 있다.

유엔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증대에 발맞추어, 유엔의 능률제고를 위한 노력이 보다 구체화 되어가고 있음을 또한 지적할 수 있다. 유엔의 조직개편 문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시일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회원국으로서 두번째 총회를 맞은 우리 대표단은 각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주요 관심분야라 할 수 있는 군축, 환경, 무역 및 인권의제등과 관련하여 정보수집, 토의 참여, 결의안 공동제안 등은 물론 막후교섭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제1위원회(군축, 안보)에서의 우리대표단 활동은 유엔 다자군축분야 전반에 걸쳐 우리입장을 개진하되, 특히 대량파괴무기 비확산등 한반도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에 역점을 두었다.

우리 대표단은 제1위원회 기조연설을 통해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다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는 가운데, IAEA 핵사찰강화와 안보리의 역할강화를 제의하였고, 다수국가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지지 하였다. 특히 북한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북 상호사찰 이행 필요성과 우리의 사

찰 이행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제2위원회(경제)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에 기초한 선후진국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교량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제 토의시 우리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한편 제3위원회(사회)에서 우리대표단은 인권, 사회개발, 마약, 여성문제 등 주요의제 토의시 우리의 기본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으며, 사회개발 정상회의 개최결정 및 세계인권회의 관련 결의안 등 주요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서방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대립이 여전한 유엔내 사회문제 토의가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규범의 하나가 된 소수민족 권리에 관한 선언 채택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소수민족의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 해외동포의 권리보호 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에의 기여는 그 자체가 훌륭한 목표이나, 동시에 우리의 위상제고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점을 십분고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국익확보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유엔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非同盟 外交

가. 우리나라의 非同盟에 대한 外交

비동맹운동은 현재 108개의 회원국을 갖고 있으며 유엔을 제외하고는 가

장 큰 규모의 정치적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동맹운동은 회원국간의 유사한 정치, 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동서대결의 틈바구니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 비동맹운동은 주요 국제문제에 대하여 공통입장을 정립하여 단합된 영향력을 과시하는 한편, 경제적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간의 남남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동맹은 1960년대 창설이후 1970년대까지 반서방적 자세를 보여 왔으며 1975년 북한의 가입이후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매우 편향된 입장을 취해왔다. 따라서 그간 우리정부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비동맹의 시각을 바로 잡고 비동맹에서 북한의 대남비방과 정치선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외교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1988년 「7. 7 특별선언」을 통해 유엔·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에 불필요한 대결·경쟁외교를 지양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고, 이에따라 우리의 대비동맹외교는 남북한 대결차원이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과의 실질협력관계를 중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나. 非同盟運動과 韓半島問題

비동맹운동에서 처음으로 한반도문제가 거론된 것은 196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2차 비동맹 정상회의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분단국 문제의 하나로 간접 거론하였다. 이후 1970년 잠비아 루사카에서 개최된 제3차 비동맹 정상회의부터 1981년 뉴델리 외상회의를 제외한 모든 정상회의와 외상회의의 최종선언문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비동맹운동의 주도권이 친공산 강경파 국가들로부터 중도·온건파 국가들에게 넘어오면서 한반도문제는 더이상 비동맹회의의

주요의제로 취급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동맹은 북한측의 기도에 따라 매 회의시마다 동일한 내용의 한반도 조항을 채택해 온 바 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 질서속에서 비동맹운동의 방향에 대한 논란이 비동맹 자체내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정부는 이에 맞추어 비동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립적이고 균형된 입장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 결과 1991년 가나에서 개최된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외세배제, 외군철수 등의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한반도 조항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비동맹의 온건화와 함께 냉전종식이라는 국제정세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며, 또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 직접 교섭과 대화를 통해 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 많은 비동맹 회원국들이 동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 最近 非同盟運動의 향후 진로

동·서 양진영간 제3세력으로서의 비동맹운동은 냉전체제붕괴후 향후 진로를 재정립해야 할 상황에 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92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0차 비동맹 정상회의는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비동맹운동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기위해 부심하였다.

즉 자카르타 정상회의는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을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는 과도기로 규정, 비동맹의 목표와 역할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로서, 1992년 5월 조정위 각료회의 이후 비동맹 탈퇴국은 없고 오히려 7개국이 정회원국으로 신규가입하였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정상회의는 국제환경의 변화를 감안, 국제평화·안

보문제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제·사회적 제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하는 등 실용주의적 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제10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는 유고 축출문제 등 정치외교면에서 회원국간 대립·갈등이 노출되었던 바, 이러한 내부 갈등요인 극복과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문제가 향후 비동맹운동의 과제가 될 것이다.